

실전 05 (★★☆)

맬서스의 인구론

<1문단> 맬서스가 제시한 '철의 인구 법칙'

곡물 가격이 폭등하자 곳곳에서 폭동과 소요가 일어났다는 국제 뉴스의 분석에는 영국의 경제학자 맬서스의 이름이 자주 거론되어 왔다.

→ 맬서스라는 경제학자가 곡물 가격 폭등과 관련한 어떤 이야기를 했나 보군요.

맬서스는 1798년에 쓴 [인구론] 초판에서, 인구는 제어되지 않을 경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만 늘어나며, 인구는 25년마다 두 배로 늘어나게 마련이라는 '철의 인구 법칙'을 제시했다.

→ 인구론에서는 한마디로, 인구는 <제어되지 않을 경우> 어어어어엄청(기하급수적) 늘어나는데 식량은 그냥...(산술급수적) 늘어난다라는 말을 했나 보군요.

즉 인구는 자연의 힘에 의해 끝없이 늘어나는 경향을 띠게 되지만, 식량 공급은 그것을 생산할 토지가 유한하다는 문제 때문에 증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리라고 예측한 것이다.

→ 기하급수 / 산술급수라는 단어를 몰랐어도, 이 문장을 통해 추론할 수 있었겠네요. 맬서스가 밀도 끝도 없이 저런 주장을 [인구론]에 담은 것이 아니라면, 왜 "인구가 제한되지 않으면 기하급수로 증가하고 식량은 산술급수로 증가하는지" 설명 해 주어야 합니다.

<2문단> 맬서스가 고려한 변수간 관계

이러한 예측과 관련하여 맬서스는 인구 변화와 생활 수준, 그리고 사망률, 출생률 등의 관계를 고려하였다.

→ 맬서스는 인구 변화, 생활 수준, 사망률, 출생률의 관계를 고려하여 1문단에서의 주장을 한 것이군요. 이 수치들간에 어떤 관계를 고려했길래 이러한 결론이 나온걸까요?

인구가 증가하면 수확 체감의 법칙으로 인해 생활 수준이 떨어지고, 이는 다시 사망률의 상승과 출생률의 하락을 가져와 인구 증가를 중단시킨다.

→ 인구 증가 → (수확 체감 법칙 작용) 생활 수준 ↓ → 사망률 ↑ + 출생률 ↓ → 인구 증가 중단

이합니다. 수확 체감 법칙이 적용 되면 인구 증가가 일어나도 '자연적으로' 인구 증가가 중단된답니다.

이러한 단순 모델에서는 인구 증가율이 0이 될 때 국민 경제가 균형 상태에 놓이게 된다.

→ 인구 증가율이 0이 되면, 국민 경제가 균형 상태에 놓인다는데요. 인구 증가율이 0이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사망률 = 출생률입니다.

균형 상태가 되면 임금이 변하지 않게 되며 출생률과 사망률도 변하지 않는다.

→ 사망률 = 출생률 → 균형 상태 → 임금 변동x & 출생률과 사망률 변동x
입니다.

임금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활 수준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말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사망률과 출생률이 같아지는 순간, 생활 수준은 그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출생률과 사망률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때 균형은 안정적이다. 어떠한 외부적 교란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상쇄할 변화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 외부적 교란 요인이 있어도, 다른 변수에서 이 교란 요인을 상쇄할 변화가 생기 때문에 안정적인 균형 상태가 유지된답니다.

아니 그래서 어쩌라는거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맬서스의 주장이 나온다는 걸까요?

<3문단> 인구학적 현상과 철의 인구 법칙 간의 관계

바로 이 균형의 안정성이야말로 맬서스가 견지했던 비관주의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 이제 이 균형의 안정성(=외부 교란 요인이 발생해도 균형은 유지 된다)이 어

땡게 맬서스 주장의 토대가 되었는지 제시되겠군요.

예컨대 경작할 토지의 규모가 늘어난다면 생산이 확대되고 당대 인구의 생활 수준은 개선될 것이다.

→ 네 그렇죠.

그러나 이 과정은 지속되지 못한다.

→ 네? 왜 생산이 무한히 확대되고 생활 수준이 지속적으로 개선되지 못하나요?

곧 출생률이 상승하고 사망률이 하락하면서 인구가 늘어나 1인당 식량, 즉 임금은 다시 하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 아! '경작할 토지 규모가 늘어났다'는 것은 외부 교란 요인인데, 그놈의 균형의 안정성 때문에 다른 변수인 '출생률', '사망률'이 바뀌어 그 결과 인구가 늘어나서 임금이 하락하는군요!

그러면...

결국에는 1인당 식량은 다시 이전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다.

→ 다시 균형의 상태(1인당 식량이 이전 수준으로 = 임금이 변하지 않음)로 돌아가는군요.

결국, 외부 요인(기술의 발전에 따른 경작 가능 지역 증가라든가, 기타 혁신적인 농법 개발이라든가...)으로 인한 생산량 증가의 상황에서도 임금, 다시 말해 생활 수준은 개선되지 못하는군요.

맬서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러한 인구학적 현상이야말로 철의 인구 법칙을 버리는 용광로라고 할 수 있다.

→ '철의 인구 법칙'은 식량은 조금 늘어나는데, 인구는 통제를 안 하면 25년마다 두 배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철의 인구 법칙이 관철되는 상황에서는 사망률이 늘어나거나 출생률이 억제될 때에만 생활 수준의 영속적 개선이 가능하다.

→ 사실 균형 상태의 안정성을 가지고는 '왜 인구가 증가하는지' 설명이 안됩니다.

아니, 인구가 증가하면 생활 수준 떨어지고 인구 증가가 중단된다면서요???? 그럼 인구 증가 안 하는거자나??

이 글에서 이야기 해 주지 않은 부분을 언급하면,
왜 인구가 증가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수월할 것입니다.
 (사실 몰라도 이 지문 해당하는 문제 푸는 데는 지장 없지요.)
 이제부터 얘기할 것은, 제 생각이 아니고 맬서스의 생각입니다.

2문단에서, “이러한 단순 모델에서는 인구 증가율이 0이 될 때 국민 경제가 균형 상태에 놓이게 된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인구증가율은 0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성욕 때문에 출산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맬서스가 인구론을 1798년에 썼다는 점을 감안합시다;; 일단 덮어두고 낳았ㄱ... 아 그만합시다)
 그러므로 출생률 > 사망률이고, 인구는 계속 계속 증가 해요.

생산량 역시 증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증가하면 노동력이 늘어나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이 지점에서 수확 체감 법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생산량의 증가폭은 인구의 증가폭을 따라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생활 수준(=생산량/인구)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개인의 생활 수준이 떨어지면 사망률이 증가하고 출생률은 떨어져야 하 걸랑요? 여기에 외생 변수가 들어갑니다. 당시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생활 수준이 떨어져도) 사망률이 증가하지 않고, 출생률은 떨어지지 않습니다.(또한 성욕의 존재로 인해... 먹고살기 힘들다고 애 안낳는거 아니라..그만합시다.

그래서, 인구는 균형상태와 상관 없이 증가하고, 생산량은 조금씩만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3문단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생활 수준의 영속적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지요? 생활 수준의 영속적 개선이 이 당시 학자들의 주요한 관심사 중 하나였습니다.

인구론이 쓰여진 영국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산업혁명 이후로 다들 해피 해피하게 살아야하는데, 사실 부의 편중 때문에,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불행하게 살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 에 대해서도 고민했겠지요.

그 상황에서 맬서스는 이렇게 이야기 했다는 것입니다.

“애들아,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생산량이 그것에 못 따라오거든? 그리고 말이야.. 만약에 만약에 말이야 인구 증가율이 0이라고 쳐보자고! 그 상태에서 경작할 토지 규모가 늘어났다고 해보자고. 그러면 또 인구 증가율이 양수가 될 것이고, 결국에는 생활 수준이 원래대로 되돌아올 수 밖에 없잖아(3문단 내용) 그래서 개인의 생활 수준은 진짜 딱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만한 수준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어 ㅎㅎ 근데 이거 너무 비참하잖나? 그러니까 말이야...

혹시 니들이 생활 수준의 영속적 개선을 하고 싶으면, 살아보려면, 사망률을 늘리거나 출생률을 억제시켜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통제해야 해 ㅎㅎ 입을 줄여야 생활 수준이 개선되는거임!”

누군가가 맬서스에게 물어봅니다.

“야 근데 니 말대로 인구증가는 기하급수적으로, 생산량증가는 산술급수적으로 일어나서 먹고 살게 없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미 생활 수준은 사람이 살 정도의 최소 수준도 보장 못해서 사람들 다 굶어 죽어있어야 하는거 아냐? 이거 사쿠라네”

맬서스가 답합니다

“노노 이미 사람들 흑사병이나 십자군전쟁 이런 걸로 한번씩 다 휩쓸려서 하늘나라 갔음 그래서 니들이 지금 살아있어서 나한테 헛소리 하는거임 ㅇㅋ?”

<4문단> 억제책의 개념과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맬서스의 관점

그래서 맬서스는 처음 [인구론]을 쓸 때, 인구와 그 인구를 먹여 살릴 능력이 상호 조화를 이루려면 재난, 전쟁 등을 통해 사망률이 높아지는 '적극적 억제책'이 불가피하다는 어두운 전망을 도출해 냈다.

→ 사망률을 늘리거나, 출생률을 억제해야만 생활 수준의 영속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맬서스는 “사람들이 한번에 확 죽어야 생활 수준의 영속적 개선

이 가능하다!”라는 어두운 전망을 제시했군요..

그리고 1803년에 출간된 제2판에서는 **한결 누그러진 개념이 추가로 등장**하였다.

→ 어떤 누그러진 개념이 나왔을까요..

금욕이나 만혼(晩婚) 같은 ‘**예방적 억제책**’을 통해 사망률 대신 **출생률에 영향**을 미치면 인구 증가는 농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억제될 것이므로, 너무 적은 식량을 너무 많은 입으로 나누어야 하는 **냉혹한 논리를 중화**시킬 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 본인이 생각해도 인류의 미래를 너무 비관적으로 봤다고 여겼는지, 이미 있는 사람 한번에 확! 가버릴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보다는, “애들 덜 낳으면 그래도 우리 그럭저럭 먹고 살만함”이라고 이야기했군요.

이런 맥락에서 맬서스는 **빈곤층에게 소형 주택을 제공하려는 정책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했다.

→ 빈곤층에게 소형 주택을 주면 예방적 억제책에 악영향을 주나보네요?

이 정책은 **빈곤층의 조혼(早婚)**을 권장하여 결국 **인구 과잉**으로 이어지게 할 것이기 때문에 빈곤층을 돕는 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 아... 소형 주택 주면... 빨리 결혼하게 되어서.. 사람이 많아지고... 입이 많아지면 생활 수준은 떨어질 것이고... 떨어진 생활 수준의 직접적 영향은 빈곤층이 받겠군요...

맬서스의 견해는 모질고 비인간적인 것으로 비쳐, 사회 개혁을 꿈꾸던 사람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았지만, 맬서스는 이런 비판에 대해 ‘사회 시스템의 문제에서 생리학과 병리학은 구별되어야 한다.’라며 맞섰다.

→ 사회 개혁을 꿈꾸는 사람들은 “맬서스 너무 비인간적이네..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망률을 올려야 한다고? 빈곤층은 조혼 하지 말라고? 와...” 라고 비판했답니다. 그에 대해 맬서스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 내가 정치가임? 내가 언제 전쟁 하자고 했음? 나는 그냥 사회 구조상 생활 수준의 개선이 어렵다는 걸 얘기한거고.... 생활 수준 개선 하고 싶으면 사망률

늘리거나 출생을 줄여야 한다는 분석만 한건데? 나는 분석만 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함? 내가 언제 "사회의 생활 수준은 개선 되어 한다 그러니까 사망률 올리 기 위해 전쟁하자"라고 이야기함?"

<5문단> 인구 증가에 대한 맬서스의 입장

[인구론]의 내용 때문에 맬서스는 인구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인식되었다.

→ 지금까지 본 바로는, 맬서스가 인구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다고 충분히 인식될만 하지요.

그러나 이는 맬서스가 인구 과잉이라는 문제적 조건 속에서 작동하는 사회의 기능 이상에 대한 설명을 지나치게 명료하고 강력하게 제시한 까닭에 빚어진 오해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 근데 , 맬서스가 너무 맞는 말을 강하게 해서 '부정적 입장'을 가진 것이라고 보여졌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맬서스도 이를 의식한 듯 제3판 이후부터는 자신이 '인구의 적'이 아니며 식량의 공급과 비례 관계를 유지하는 한도내에서 지속적인 인구 증가를 옹호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강조했다.

→ 맬서스도 본인이 인구 증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졌다는 인식에 대해 해명하고 싶었나 보군요.

<6문단> 맬서스의 이론이 지닌 의의

결과적으로 볼 때, 맬서스를 훌륭한 예언자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 훌륭한 예언가가 아니라는 것은, 그의 우려가 현실화 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지요.

그의 예측이 현실화되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 그렇지요?

그러나 수확 체감에 관한 그의 가정은 영국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에게 널리 수용되었으며, 1인당 식량이 점차 생존 수준에 수렴하리라는 명제는 임금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저 생계비 수준으로 결정된다는 고전학파의 임금 이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 그렇지만 그의 논리 전개에서 사용된 가정과 명제는 '고전학파'(not 고전파...)에 영향을 주었군요. 고전학파의 유명한 경제학자로는 어디서 들어봤을 법한 '보이지 않는 손'을 이야기하며 '자유시장경제'의 시조새격이 된 애덤 스미스, 비교우위설로 알려진 리카르도 등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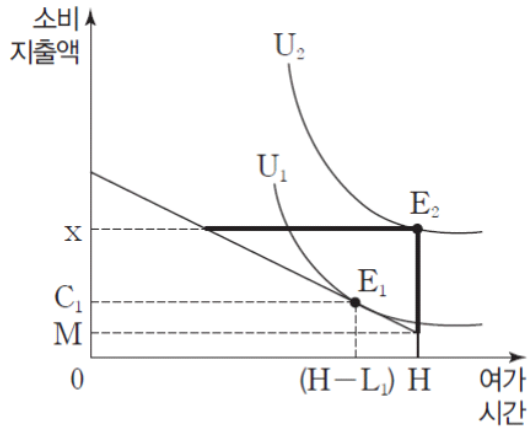
무엇보다 그는 인구가 생활 수준에 미치는 필연적 효과를 역동적으로 설명했으며, 그의 이론은 당대의 경제학이 역사의 무대 뒤로 퇴장한 오늘날까지도 경제학자들의 사유 훈련에서부터 정책 결정을 둘러싼 여론 형성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 맬서스의 '철의 인구 법칙'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인구 증가가 지속 되는 상황에서, 생산량이 '산술급수'가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거든요. 어마무시한 기술의 발전 덕택이지요. 그럼에도 그의 이론은 현대에까지 여러 차원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세제(실전 5회, p.253)>

‘근로장려세제’(EITC)란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이다.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을 얻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호제도’에 비해 EITC는 근로자의 근로 욕구를 자극하여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먼저 저소득 근로자 A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호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가-소비 모형을 가정하자. 소비를 위해 C만큼 지출하는 A의 재산 소득은 M으로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 A의 시간당 임금을 W, 노동 시간을 L이라고 하면, 근로 소득은 WL이 된다. 소득 이상으로 소비 지출을 할 수는 없으므로 A는 $C \leq M + WL$ 이라는 예산 제약에 놓이게 된다. 또한 A의 총 가용 시간이 H라면, A의 여가 시간은 총 가용 시간에서 노동 시간을 제외한 $(H-L)$ 이 된다. 이 때 A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여가 시간과 소비 지출액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그림>

<그림>의 E₁은 소득 지원을 받지 못할 때 A의 선택을 나타낸 것이다. E₁을 지나는 곡선 U₁은 A의 효용 수준을 나타낸 무차별 곡선으로, 무차별곡선이란 동일한 효용을 주는 여가 시간과 소비 지출액의 조합을 연결한 선이며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높은 효용을 나타낸다. 즉 A는 주어진 예산 제약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여가 시간 $(H-L_1)$ 과 소비 지출액 C₁을 선택하며 U₁의 효용을 얻고 있다. 따라서 노동 시간은 L₁이 된다.

이제 A의 소득이 기초생활비인 x가 되도록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자. 즉 소득이 기초생활비 미만일 경우 기초생활비와 소득 간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준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비인 x보다 소득이 작은 구간에서는 A의 예산 제약을 나타내는 선이 수평선으로 변화하는데, 이는 A의 시간당 임금이 실질적으로는 0으로 하락한 것과 같은 효과로 작용한다.

이러한 예산 제약의 변화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일으켜 A의 선택을 변화시킨다. 먼저 대체효과란 여가와 소비 간에 상대적인 가치가 변화하기 때문에 선택이 변화하는 효과이다. 시간당 임금이 실질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여가의 기회비용이 낮아

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여가 시간이 증가하고 소비가 감소한다. 여가 시간이 증가하면 총 가용 시간 중 여가를 제외한 시간인 노동 시간은 감소한다.

또한 소득 지원으로 인해 A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소득효과가 나타난다. 소득효과란 경제 주체의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선택이 변화하는 효과이다. 소득이 늘어나면 여가 시간과 소비가 증가하게 되므로 노동 시간이 감소한다. 즉 기초생활보호제도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에 의해 근로자의 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극단적인 경우(E₂) A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이유는 보조금 지원이 A의 근로 욕구를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초생활보호제도의 부작용과 달리 EITC는 근로 욕구를 자극하여 노동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 EITC는 근로자들을 소득 수준에 따라 ‘점증 구간’, ‘평탄 구간’, ‘점감 구간’의 3개의 소득 구간으로 나누고 각 소득 구간별로 차등적인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때 소득이 점증 구간인 근로자에게는 노동 시간이 늘어날수록 이에 비례하여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며, 평탄 구간인 근로자에게는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점감 구간인 근로자에게는 노동 시간이 늘어날수록 보조금을 줄인다.

EITC하에서 A가 점증 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A는 노동 시간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A가 노동 시간을 증가시킬 경우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A의 시간당 임금이 상승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여가의 기회비용이 높아지므로 대체효과에 의해 여가 시간이 감소하고 소비가 증가한다. 따라서 노동 시간은 증가한다. 반면 소득효과는 여가 시간과 소비를 늘리고 노동 시간을 줄인다. 보조금으로 인해 A의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 A의 소득 수준이 매우 낮아 EITC로 인한 소득효과보다 대체효과가 크다면 A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도 노동 시간을 증가시킬 것이다. 즉 EITC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근로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

*효용: 근로자가 소비와 여가를 통해 얻는 만족을 수치로 나타낸 것.

<1문단>

'근로장려세제'(EITC)란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이다.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을 얻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호제도'에 비해 EITC는 근로자의 근로 욕구를 자극하여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1문단 분석>

근로장려세제 vs 기초생활보호제도의 차이점을 반드시 check!
 근로장려세제: 근로자의 소득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급
 기초생활보호제도: 일정 소득 보장

마지막 문장을 통해, 후술될 본문에서

- 1) 기초생활보호제도의 소득 보장 원리 및 근로장려세제(=EITC)의 보조금 지급 원리(이는 근로자의 소득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 2) 기초생활보호제도에 비해 근로장려세제가 노동 공급을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이야기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어떤 글이든, 1문단에서 예측한 내용이 지문에 전부 제시되었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하자. 예측한 내용이 없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있는 내용만을 잘 받아들이면 된다.

<2문단>

먼저 저소득 근로자 A에게 일정 소득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호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가-소비 모형을 가정하자. <소비를 위해 C만큼 지출하는 A의 재산 소득은 M으로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 A의 시간당 임금을 W, 노동 시간을 L이라고 하면, 근로 소득은 WL이 된다. 소득 이상으로 소비 지출을 할 수는 없으므로 A는 $C \leq M + WL$ 이라는 예산 제약에 놓이게 된다. 또한 A의 총 가용 시간이 H라면, A의 여가 시간은 총 가용 시간에서 노동 시간을 제외한 $(H-L)$ 이 된다.> 이 때 A는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여가 시간과 소비 지출액을 선택한다고 가정한다.

<2문단 분석>

우리는 이미 1문단을 통해 이 효과가 EITC의 경제적 효과에 비해 근로자의 근로 욕구를 자극 시키지 못하고, 따라서 EITC에 비해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다. 2문단에서는 EITC를 분석하기 전에 먼저 비교군으로서 기초생활보호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알아보는 목적으로, 여가-소비모형이 제시된다.

< > 부분에 나오는 알파벳과 개념과의 연관 관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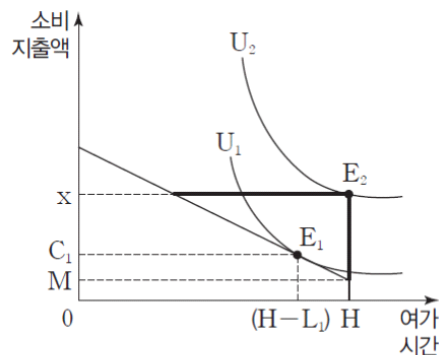
A: 저소득 근로자 / C: 소비를 위한 지출 / M: 재산 소득
 W: 시간당 임금 / L: 노동시간 / H: 가용 시간

마지막 문장을 통해, 우리는 차후 논의 전개에 결과 값으로 A의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특정한 $(H-L)$ 값과 C의 값이 제시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수학적 감각이 뛰어난 학생이라면, " $C \leq M + WL$ "이라는 식과 "여가 시간= $H-L$ "이라는 식을 통해 C와 여가시간은 WL로 인해 역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으나, 이 정도까지 이 시점에서 이해할 필요는 없다.)

본문에서 굳이 특정 개념을 알파벳으로 치환했다는 것은, 치환된 알파벳을 통해 추가적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또한, 수식이 나온다면 이를 반드시 따로 써주자. 비록, 지문을 읽어가며 그 수식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수식을 통해 풀어내야 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접근이 수월하다.

<3문단>



<그림>

<그림>의 E1은 소득 지원을 받지 못할 때 A의 선택을 나타낸 것이다. E1을 지나는 곡선 U1은 A의 효용 수준을 나타낸 무차별 곡선으로, 무차별곡선이란 동일한 효용을 주는 여가 시간과 소비 지출액의 조합을 연결한 선이며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더 높은 효용을 나타낸다. 즉 A는 주어진 예산 제약에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여가 시간 $(H-L_1)$ 과 소비 지출액 C_1 을 선택하며 U1의 효용을 얻고 있다. 따라서 노동 시간은 L_1 이 된다.

<3문단 분석>

<그림>을 보기에 앞서, 이 <그림>을 통해 소득 지원을 받지 못하는 case에서 A의 선택을 확인(특히, A의 노동 공급을 확인)해야 한다는 target을 명확히 하자. <그림>의 x축과 y축, 그리고 선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그 이후이다.

왜 주어진 예산 제약선의 기울기가 -이며, (H, M) 의 좌표를 지

나는지 고민하기 보다는, <그림>을 읽어내는 목적 그대로, "소득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의 A는 ($H-L_1, C_1$)을 선택 하는구나"를 파악해야 한다. 특히, L_1 의 크기에 주목해야 한다. "소득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설명을 해 줬으니, 이제는 "소득 지원을 받는 상황(=기초생활보호제도 도입의 상황)"을 설명해 줄 것이다. 그래야 2문단 첫 문장에서 밝힌 기초생활보호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graph가 지문에서 나온다면

- 1) graph를 통해 확인해야 하는 target 설정
- 2) x축, y축, 그리고 graph상의 점, 선의 의미 파악
- 3) 2)를 바탕으로 1)의 target 확인의 순서를 반드시 따르자.

상황을 정리해줌으로써 대체효과가 A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주목해야 한다.

대체효과: 여가 - 소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한 선택 변화

시간당 임금 실질↓ → 여가의 기회비용↓ → 여가 시간↑ & 소비↓
→ 노동시간↓

대체효과는 노동시간을 줄이는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파악해 내었으면 이 문단은 정리가 된 것이다.

화살표로 표시해 줄 수 있는 연쇄적인 변화가 제시된다면, 최초의 원인과 최후의 결과에 주목하자. 중간 과정의 필연성에 대해 고민할 이유는 없다.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

<4문단>

이제 A의 소득이 기초생활비인 x 가 되도록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자. 즉 소득이 기초생활비 미만일 경우 기초생활비와 소득 간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준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비인 x 보다 소득이 작은 구간에서는 A의 예산 제약을 나타내는 선이 수평선으로 변화하는데, 이는 A의 시간당 임금이 실질적으로는 0으로 하락한 것과 같은 효과로 작용한다.

<4문단 분석>

첫 문장을 통해 A가 기초생활비를 보장받는 상황임을 파악하자. 또한 <그림>에서 아직 설명되지 않은 부분인 굵은 직선이 바로 "소득이 작은 구간에서 A의 예산 제약을 나타내는 선이 수평선"임을 확인하도록 하자.

이제, 바뀐 예산 제약을 나타내는 선을 통해 A의 다른 선택의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와 소득 지원을 받지 못했을 때의 선택($H-L_1, C_1$)의 차이를 통해 기초생활보호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보여줄 것이다.

<6문단>

또한 소득 지원으로 인해 A의 소득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소득효과가 나타난다. **소득효과**란 경제 주체의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선택이 변화하는 효과이다. <소득이 늘어나면 여가 시간과 소비가 증가하게 되므로 노동 시간이 감소한다.> 즉 기초생활보호제도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에 의해 **근로자의 노동 시간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극단적인 경우(E_2) A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이유는 보조금 지원이 A의 근로 욕구를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6문단 분석>

소득효과: 소득 변화에 따른 선택 변화
소득↑ → 여가 시간↑ & 소비↑ → 노동시간↓
소득효과는 노동시간을 줄인다는 점을 파악했다면, 즉 이후의 문장을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4문단~6문단을 통해 기초생활보호제도는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파악했다.

<5문단>

이러한 예산 제약의 변화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일으켜 A의 선택을 변화시킨다. 먼저 **대체효과**란 여가와 소비 간에 상대적인 가치가 변화하기 때문에 선택이 변화하는 효과이다. <시간당 임금이 실질적으로 하락한다는 것은 여가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여가 시간이 증가하고 소비가 감소한다. 여가 시간이 증가하면 총 가용 시간 중 여가를 제외한 시간인 **노동 시간은 감소**한다.>

<5문단 분석>

첫 문장을 통해, 대체효과, 소득효과를 통해 A의 선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설명해 줄 것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대체효과라는 용어의 정의도 중요하겠으나, <>의 구체적인

이제 EITC를 이야기 해주어야 한다. 물론, EITC는 노동 공급(=노동시간)을 증가 시킬 것이다. 그래야 1문단과 상충되지 않는다.

<7문단>

이러한 기초생활보호제도의 부작용과 달리 **EITC**는 근로 욕구를 자극하여 **노동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 EITC는 근로자들을 소득 수준에 따라 '점증 구간', '평탄 구간', '점감 구간'의 3개의 소득 구간으로 나누고 각 소득 구간별로 차등적인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때 소득이 점증 구간인 근로자에게는 노동 시간이 늘어날수록 이에 비례하여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하며, 평탄 구간인 근로자에게는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점감 구간인 근로자에게는 노동 시간이 늘어날수록 보조금을 줄인다.

<7문단 분석>

EITC: 근로 욕구 자극 → 노동 시간 증가

소득 수준에 따른 근로자 구분

- 1) 점증 구간: 노동시간↑→ 보조금↑
- 2) 평탄 구간: 일정 금액
- 3) 점감 구간: 노동시간↑→ 보조금↓

이제, 소득 수준에 따른 보조금 지급이 어떻게 '근로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어야 한다.

<8문단>

EITC하에서 **A가 점증 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자**라면 A는 노동 시간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 <A가 노동 시간을 증가시킬 경우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A의 시간당 임금이 상승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여가의 기회비용이 높아지므로 **대체효과**에 의해 여가 시간이 감소하고 소비가 증가한다. 따라서 **노동 시간은 증가한다.**> 반면 <**소득 효과**는 여가 시간과 소비를 늘리고 **노동 시간을 줄인다.** 보조금으로 인해 A의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만약 현재 A의 소득 수준이 매우 낮아 EITC로 인한 소득효과보다 대체효과가 크다면 A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면서도 노동 시간을 증가시킬 것이다. 즉 EITC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근로 욕구를 자극할 수 있다.

<8문단 분석>

점증 구간에 해당하는 노동자 A

시간당 임금↑효과→여가의 기회비용↑→(by **대체효과**)→여가 시간↓&소비↑→**노동 시간↑**

(by **소득효과**)→여가 시간↑&소비↑→**노동 시간↓**

if 소득 수준↓→대체효과 > 소득효과→**노동 시간↑**

7문단에서 제시된 세 구간 중 '점증 구간', 그 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저소득 근로자는 EITC를 통해 근로 욕구를 자극 받아 노동 시간을 늘릴 수 있다. 이 결과가 기초생활보조제도의 결과(노동 시간 감소)와 대비되었음을 파악하면 된 것이다.

<TMI>

기회비용: 선택 가능한 여러 대안 중 하나의 대안을 선택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대안들 중 가장 가치가 큰 것

= 명시적 비용 + 암묵적 비용

ex) 재수생활의 기회비용

명시적 비용(학원비+식비+책값 등등) + 암묵적 비용(공부 안하고 일했으면 벌 수 있는 돈)

대체효과: 상품 간 상대가격 변화로 인해 상대적으로 비싸진 상품의 구매량은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상품은 구매량이 증가하는 효과

소득효과: 상품 가격의 등락이 소비자의 실질소득(물가를 감안한 소득) 증감으로 이어져, 상품의 구매량이 증감하는 효과